

친환경 선박 재활용 협약에 따른 국내 대응 동향

임택수 · 신영수 · 구성원* · 김정환 · 박상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Trends in domestic countermeasures based on Eco-friendly ship recycling convention

Lim T. S. · Shin Y. S. · Ku S. W.* · Kim C. H. · Park S. E.

Department of Marine Pollution Response, Korea Coast Guard

핵심용어 : 선박해체, 재활용, 협약, 제도, 규제

Key Words : Ship dismantling, recycling, Convention, Institution, Regulation

1. 개요 및 연구목적

선박해체는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부족으로 해양오염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선박해체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방지와 종사자들의 안전강화를 위해 IMO(국제해사기구)주관으로 09년 홍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비준을 위한 당사국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현실을 고려, 우리나라도 정부주도로 선박해체(재활용)와 관련한 적절한 규제와 합법적인 선박해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해체에 대한 국내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황과 사례 작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에서 집계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외 자료는 IMO MEPC 회의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선박해체·재활용 제도는 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 국제적으로도 IMO(국제해사기구)를 주관으로 2009년 홍콩협약 등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업이 될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다수 국가가 도입해오고 있으며, 선박해체·재활용량이 가장 많은 주요 5개국(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파키스탄, 터키) 및 EU 등은 선박해체와 관련한 환경오염영향과 적절한 규제조치가 필요함을 인식, 적절한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등록제도를 신고제도로 바꿔 누구나 신고하면 해체가 가능하며, 일부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조차 없어 오염물질의 적법처리와 관리가 곤란할뿐더러, 노동집약적 작업 특성상 작업자가 유해물질에의 노출,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시설 지원 등 정부주관 산업지원이 미흡한 등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4. 결론

선박해체산업은 작업자의 위험 노출, 해양 또는 대기중으로의 오염물질 배출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사고사례, 불법행위 등으로 볼 때 현행 국내 법제도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선박재활용업」 등록·자격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가에 의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선박해체산업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관리되도록 현행 법제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